



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도와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시·군, 정책적 지원 기능을 맡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더 좋은 정책개발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맺음말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내 시·군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하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공주 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금산 인삼약초 특화사업은 금산을 전국 약초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주 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처럼 일부 몇몇 식당과 한옥마을 등으로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경우나 청양 외국인체험마을조성사업, 칠갑산도립온천관광지 조성사업 등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특화산업과 주민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앞으로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도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봄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망과 과제 ■

●●●●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2010년부터 광특회계계정 시도자율편성분 재원감소 및 경기영향 등으로 인한 도분 보통세 세입감소로 도비부담액이 감소해 46억원이 감소된 539억원으로, 2011년 535억원, 2012년에는 515억원으로 해마다 관련예산이 줄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균형개발사업 추진 개선방안

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사업 선정시 현재와 같은 시군별 의무적 예산배정 방식은 자칫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해외연수시 방문했던 체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2차 지역균형개발사업 선정시 우리 도에서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지원조례(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시 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는 근거 규정은 미비한 상태로 균형발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성과 평가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원대상 시군 선정문제도 현재 인구증가율, 총 사업체 종사자 비율, 시군 재정력 지수 등 6개 항목 분석지표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평균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낙후원인별 정확한 실태분석과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유지를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등과 같은 최소기준 설정도입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시·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先 특화 자원개발방향 정립 後 지역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도 균형개발사업 추진과제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과연 충남도 지역균형개발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창출과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이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 자



도 균형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2011년말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균형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총 57개 사업중 변경계획을 거쳐 최종적으로 54개 사업으로 확정했으며, 분야별로는 문화관광분야 23개사업(42.6%), 지역특화분야 16개사업(29.6%), 기반시설 확충분야 9개사업(16.7%), 생산·유통분야 6개사업(11.1%)이며,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인삼재래시장활성화 프로젝트 등 18개 완료사업(33.3%), 공주문화관광지조성사업,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 등 35개사업(64.8%)을 추진 중이며, 정립사지 충창복원사업 1개사업(1.9%)은 설계·용역중이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예산현황〉

구분	사업지구	사업비(억원)					비고
		계	광특	도비	시군비	기타	
당초	48	4,792	1,452	1,452	1,356	531	
변경	54	4,452	1,335	1,418	1,391	308	
증감	6	△330	△117	△34	45	△223	

2011년 국토연구원 차미숙 의정자문 행정자치분과 위원이 수행한 충남의 균형발전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제시가 전제되어야 하나, 선정·추진중인 사업들의 경우 필요성, 기대효과 등 정성적인 목표위주로만 제시되어 있어 정량적인 성과평가를 하기가 곤란하다.

사업선정 과정에서도 지역전략 사업보다는 현안사업 위주로 선정되면서 지역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거나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보상지연, 문화재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 처리기간, 사업주체 변경, 시군예산 미확보 등으로 일부 사업은 2~3년 정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1차 균형발전계획(2008~2012)기간 내 사업이 끝나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아 균형발전사업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타 사업을 지속추진 함으로써 고도화 내지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경우 단위 사업이 종료되거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경우는 후속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균형발전사업 재원확보 면에서도 국가균특회계 개편과 도분 보통세 세수감소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를 들 수 있다. 매년 필요한 재원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580억원 규모이나, 2008년, 2009년은 각각 당초 계획대로 585억원의 사업

■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망과 과제 ■

구의 48%를 차지한 반면, 금산군 5만 9,806명, 계룡시 4만 3,115명, 청양군 3만 3,174명으로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17.6:1로 지역간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남부권 7개 시·군(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의 인구는 52만 8천명으로 천안시 전체인구 58만 5천명보다 적다.

또한 2012년말 도내 총 산업단지는 110,460천㎡규모로서 이중 북부권 4개 시·군이 72,368천㎡으로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인 당진시 36,077천㎡와 최저 태안군 144천㎡는 250.5:1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수 비교에서도 도내 총 제조업체수 6,225개 중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 4개 시·군이 3,824개로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인 천안시 2,003개와 최저 청양군 56개와는 35.7:1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및 인구가 편중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경과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내균형 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추진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충청남도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으며 5년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집행으로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 시군 선정 기준은 매 5년마다 인구증가율,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노령화지수, 시군 재정력지수, 소득세할 주민총액, 도로율 등 6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분석지표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평균미만인 낙후지역 8개 시·군을 선정(도청이전(내포)신도시 건설지역인 홍성·예산군 제외)해 市지역은 매년 60억원, 郡지역은 매년 8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의 투자규모는 道 보통교부세 징수액의 5%이내 일반회계전입금 290억원과 국가균특지역개발계정 道 배정분의 10%이내 보조금 예산 224억원 등 총 51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열린마당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망과 과제

유익환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임진년의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총선과 대선 등 국가적 중대사가 얼마남지 않았다. 올해 충남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해로 80년만에 대전을 떠나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며,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성공적인 이전과 출범을 기대하면서 2012년까지 제1차 계획 기간의 마무리 단계를 지나고 있는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추진 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배경

국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격차로 인해 수도권 경부축 발전지역과 나머지 쇠퇴 지역의 양극화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되듯이 지방에서도 국가차원의 불균형화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용하여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권은 산업고도화에 의한 눈부신 성장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부여·서천·청양 등 서남부권은 상대적 저성장으로 낙후되어 충남도에서는 지역간 발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시군별 인구, 산업단지 등 지표현황

2011년 말 우리도 전체 인구는 214만 9,374명으로 천안시 58만 5,587명, 아산시 28만 5,411명, 서산시 16만 4,345명 순이며, 천안·아산·당진 등 서북부 3개 시·군이 전체인